

“미사일” 광풍

우라베 노리호(浦部法穂) 호우각칸(法学館)헌법연구소 고문

2009년 4월 20일

말그대로 “전쟁전야”와 같은 괴상한 소동이 벌어졌다. 정부와 매스미디어는 당장이라도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것처럼 소란을 피웠다. 부끄럽게도 “오보”라는 “덤”까지 없어서. 4월 5일 일어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동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북한은 사전에 4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것을 국제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그리고 5일에는 위성 발사를 성공하여 궤도에 올랐다고 발표하였으며, 며칠 뒤에는 발사 당시의 영상을 공개했다. 화면에 비춰진 것은 분명히 3단 로켓이었으며, 그 머리부분에는 위성처럼 둥근 물체가 탑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어떠한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으며, 위성 발사 성공이라는 북한의 발표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4월 5일에 “발사”된 것이 정말 인공위성이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인공위성이건 미사일이건 로켓을 추진장치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가령 그것이 인공위성 발사였다 하더라도 그 기술은 쉽게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핵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기술까지 손에 넣는 것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강한 경계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의 소동은 심상치 않았다. 정부와 매스미디어는 처음부터 “로켓발사”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였다. 예를 들면 NHK의 보도 등은 일관되게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말하며 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식의 논조였다. 한국이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로켓발사”라는 식으로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게다가 그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하여 발사될 것처럼, 정부는 일찌기 “요격”체제를 갖추고 “파괴조치명령”을 내렸다.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동해에 2척, 태평양에 1척, 지상배치형요격미사일 PAC3를 아키타현(秋田県), 이와테현(岩手兩県)과 도쿄(이치가야 市ヶ谷)에 배치한 것이다. 완전한 “전투태세”였다.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만약의 실패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라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그렇다면 왜 도쿄에까지 요격미사일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을까. 도쿄 상공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며, 상공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머나먼 대기권 밖의 일인 데도 말이다. 만약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기권 밖의 상공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물체를 “요격”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도대체 이러한 “전투태세”는 무엇이었나. 일본을 향한 미사일 공격이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태를 상정했는지, 또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미사일방위시스템의 실전훈련을 하고자 했던 것인가. “우리 지역에서 눈에 띄는 혼란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이 끝난 뒤, 전혀 무관한 지역에서 전해진 이러한 보도는 말 그대로 웃음거리였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말할 경우, 적어도 일본 입장에서 이번 “발사”는 “만일의 실패나 사고”이외에는 새로운 “위협”을 가져다 줄 만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일본을 사정거리 안에 넣은 중거리미사일을 갖고 있으며, 이미 실전에 배치되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사”에 대하여 일본이 유별나게 돌출된 소동을 벌여야만 하는 필연성은 없는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가지게 된다면, 미국 본토에 대하여 미사일 공격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런 미국마저 이번 “발사”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고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소동은 이상하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안보리 협의에서도 미국은 “유엔결의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표현의 성명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유엔결의 위반”이라고 명기할 것을 주장하는 등, 일본의 강경자세가 돌출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스스로 강경한 자세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에 그친다는 견실한 외교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대응 속에서 일본만이 북한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같은 구도를 이루는 것이 과연 일본에게 득이 되는 정책일까?

지지율 저조에 허덕이며 내각해산마저 얼마 남지 않은 아소(麻生)정권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소동을 벌여 정권의 구심력을 높이고 지지율을 회복시키고 싶을 것이다. 또한 자위대의 존재감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알기 쉬운 “적”을 만들어 권력의 구심력을 높이는 것은 권력이 사용하는 상투적인 수단이다. 북한이라는 알기 쉬운 “적”이 일본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온만큼, 이 이상 절호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게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소동을 벌이면 벌일수록, 일본이라는 알기 쉬운 “적” 덕분에 김정일 체제의 구심력은 한층 높아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의 대응은 저쪽에서 의도한 바대로인 것이다. 북한의 “벼랑끝 외교”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혀 화를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적대하는 것만으로는 대화의 길이 막혀버려 핵문제, 납치문제와 같은 현안의 해결은 멀어지기만 한다. 우리들은 정부와 매스미디어에 놀아나 소동을 벌일 것이 아니라, 냉정한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